
**국민성장펀드의 벤처·혁신기업
스케일업(scale-up) 지원 확대 방향**

2026. 3. 26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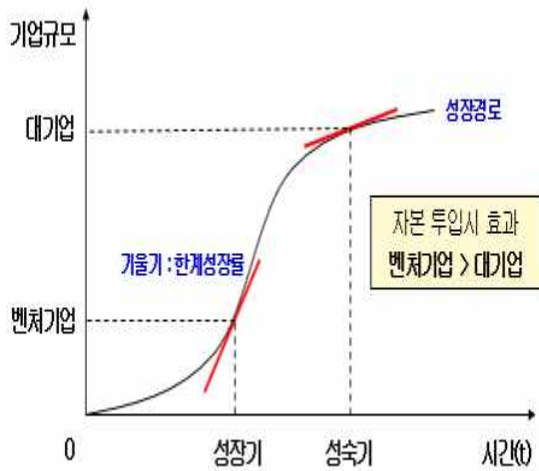
국민경제자문회의

목 차

I. 검토배경	1
II. 벤처·혁신 지원 확대 방향	2
1. 투자 규모	2
2. 투자 원칙	3
3. 투자 결정	3
4. 투자 조건	4
5. 투자 운영	5

I. 검토배경

□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위해서는 기하급수적 성장이 가능한 벤처·혁신기업에 대한 투자가 관건



- 대기업 투자는 즉각적 효과가 있으나 성숙단계인 만큼 한계성장률이 제한

- 반면 벤처 투자는 한계성장률이 높아 미래·장기 성장과실이 극대화

- 첨단산업의 '게임 체인저' 기술에서 벤처기업 출현 중*

※ 예) 애플 시리(SIRI) 및 페이스ID 인수, 구글 안드로이드 및 딥마인드 인수

□ 국민성장펀드의 벤처·혁신 생태계 지원방안은 보완 필요

- '25.12월 연간 직접투자 3조원, 간접투자 7조원, 인프라 투융자 10조원, 저리대출 10조원의 운용방안을 발표*

* 산업경쟁력강화 관계 장관 회의 겸 성장경제 T/F('25.12.16)

- 현재까지 지원사례는 모두 인프라PF 및 저리대출*이며 벤처·혁신 생태계에 배정된 연간 10조원 투자방안은 구체화 미정

* 신안우이 해상풍력 장기 후순위 대출(PF) 7,500억원, 차세대 2차전지 저리대출 1천억원, 첨단반도체 저리대출 2.5조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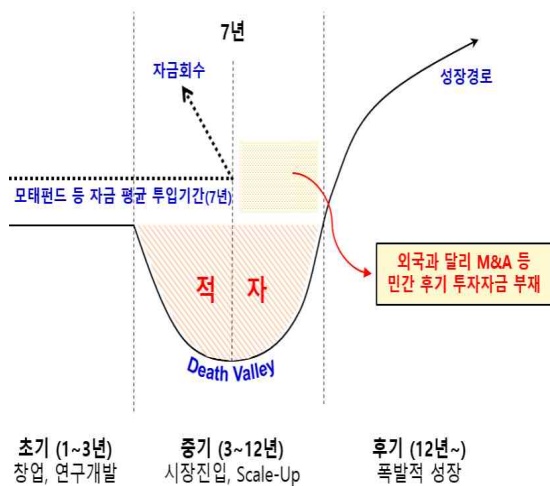
- 벤처·혁신기업의 글로벌 경쟁을 위한 적극적 스케일업(scale-up) 투자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, 미래 첨단산업 역량 확보 곤란

⇒ 핵심 성장정책인 국민성장펀드가 성장펀드 담게 작동할 수 있도록, 벤처·혁신기업에 대한 대규모 스케일업 투자방안 제안

II. 벤처·혁신 지원 확대 방향

1 투자 규모 : 대규모 스케일업 투자

□ 국내 벤처기업은 모태펀드 등 초기자금에 집중된 지원, 민간 VC 발달 미흡 등으로 스케일업 단계에서 Death Valley에 직면



-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스케일업 지원 부족으로 폭발적 성장에 한계

- 결국 경쟁력을 잃거나* 해외 이전·매각** 등 그 과실을 해외자본이 향유

* 중기부 선정 예비유니콘 126개사 ('19-'24년) 기업 중 8개사만 유니콘 등극

** AI커뮤니케이션 기업 S사는 국내 자금 조달 실패 후, '14년 미국으로 이전하여 기업가치 1조원의 '유니콘'으로 성장

정책제안

① 국민성장펀드의 투자 없이 Death Valley 극복이 어려운 만큼, 연간 10조원의 벤처·혁신기업 투자 재원을 스케일업에 집중

② 건당 투자액 또한 과감히 상향하여 국내 벤처가 자본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과 경쟁*할 수 있도록 육성

* 美 중·후기 AI·하드웨어 벤처기업 상위 26%는 6~8억 달러(약 9천억 ~1.1조) 수준의 투자 유치(美 PitchBook-NVCA Monitor 추정)

○ 소액·초기자금 지원 위주인 기존 벤처·정책금융과 차별화 될 수 있도록 대규모·장기 투자에 집중적으로 운용

2

투자 원칙 : 미래 선도기업 투자

- 첨단전략산업 벤처기업은 대규모 R&D 투자, 지속적 선투자 등 전략적 적자구조*를 취해 장기간 재무구조가 취약
 - * 첨단전략산업벤처는 일반벤처 대비 업력 및 평균자산이 높음에도 불구하고, 매출의 10% 이상의 R&D투자 등으로 전략적 적자 선택(과학기술정책연구원, '25.9.)
- 따라서, 단기적 투자안정성(재무제표·담보)에 집중한 투자기준을 운영할 경우 미래 선도기업이 될 벤처·혁신기업 발굴 곤란
 - 오랜 적자기간을 거치더라도 기술 상용화 성공 후 폭발적으로 성장할 잠재력 있는 기업을 발굴하는 선구안 발휘 필요

정책제안

- 벤처·기업은 재무적 안정성보다 미래 선도기업이 될 잠재력을 중심으로 심사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는 원칙을 확립·발표
 - ※ 과감한 스타트업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'더 이상 death Valley는 없다'는 메시지를 벤처 생태계에 제공할 필요

3

투자 결정 : 기존 정책금융과 차별화

- 일반적인 정책금융은 정책금융기관(국민성장펀드의 경우 산은) 중심으로 금융권, 관계 부처 등과 협업하여 지원 대상을 선별
 - 이 경우 혁신투자 및 벤처생태계에 대한 전문성·이해도가 부족한 투자 의사결정 체계가 구축될 가능성
- 특히 국민성장펀드는 대기업·인프라 대출 등을 병행하는 만큼, 벤처·혁신 투자를 위한 차별화된 체계가 긴급

정책제안

- 민간의 시장 감각을 존중하는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하여 국민성장펀드 벤처 투자 대상·규모 결정
 - 민간투자자(VC·AC·PE)가 시장성 있는 유망 벤처기업을 발굴, 선제적 투자 후 기업 육성·검증을 거쳐 우수기업 추천
 - ※ 국민성장펀드 지원시 '민간의 자체 선행 투자가 전제조건'이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명확히 전달하여 VC·AC·PE의 책임 있는 유망벤처 발굴노력 유도
 - 기술·시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독립적 심사체계에서 국민성장펀드 정책목표와의 합목적성을 고려하여 투자 대상 선정

4 투자 조건 : 창업자 경영권 보호

- 벤처·혁신 기업의 핵심 역량은 창업자의 아이디어와 경영능력인 만큼, 투자시 창업자 경영권이 희석*되지 않도록 보호장치 필요
 - ※ 단,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자금지원으로 인하여 보유하는 첨단전략산업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음 (산은법 §29-9⑤)
- 한편, 국민성장펀드 또한 벤처 투자에 따른 성장과실을 회수하여 후속 투자 또는 재정 수입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

정책제안

- 창업자에게 지분매수권(call-option)*을 부여하는 등 장치 마련
 - * TIPS 프로그램은 투자계약시, 회사가 발행지분의 일정부분(통상 40~60%)을 운용사가 지정한 가격(통상 연복리 15%)에 다시 살 수 있는 지분매수권 부여
- 창업자·최대주주로서 혁신동기를 보호하는 한편, 지분매수권 행사시 회수 자금은 다른 유망기업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축

5

투자 운영 : 명확한 방향성 설정

- 미래 성장동력 확충이라는 국민성장펀드의 출범 목적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는 운영체계 필요
 - 명확한 방향성 하에 운영조직·성과평가·면책 등이 마련되지 않으면 감사 등 위험회피를 위해 과거 사례를 답습할 우려
 - 10~20년의 장기 투자 후 정책환경 변화시 과도한 책임을 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

정책제안

- ① 국민성장펀드의 목적은 자금의 안전한 집행이 아닌, 위험을 감수하고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것임을 명확히 천명
 - 특히 벤처·혁신기업 투자, 기술적 난도가 높은 산업 투자 등은 개별 투자건의 손해를 감수할 수 있다는 방향성 제시
- ② 고위험 투자를 통해 성과를 얻은 경우 더 높은 실적으로 인정하는 등 위험 감수를 장려하는 성과평가 체계* 마련
 - * 싱가포르 테마섹의 경우 투자건에 대해 산업위험, 자본구조 등 투자의 위험 특성을 고려하여 성과를 평가하는 위험조정자본원가(RACOC)제도 운영 (초기산업 등에 높은 가중치 부여, 성과 달성시 보다 많은 성과금 지불)
- ③ 법률적 면책근거*뿐만 아니라 과감하고 실질적인 면책 부여
 - * 국민성장펀드 운영 관련, 산은 및 임직원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업무를 처리한 경우, 감사원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상 책임 면제(산은법 §41)
 - ①신의성실의 원칙 준수 여부, ②절차의 적정성, ③전체 펀드 운영 성과만 관리·감독한다는 대원칙 제시